

여론브리핑 제57호

EAI · 중앙선데이 · 한국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이명박 취임 1년 6개월, 국정우선순위와 하반기 국정전망

EAI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공동 매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 교수)와 한국리서치(노익상 사장) 2009년 2월부터 매달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인식의 분포와 변화를 추적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일반 국민여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정치사회 의식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매월 20일 전후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EAI 한국리서치 여론바로미터조사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국민들의 의사와 참여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본 여론조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조사일시 : 8월 22일

모 집 단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800명

표본추출 :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표본추출을 전제, 95%신뢰수준 $\pm 3.5\%$

응답율 : 12.5%

조사방법 : 전화조사(CATI)

조사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EAI 정기여론조사 연구팀

팀 장 :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 이숙중(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여론브리핑 제57호 대표집필 : 정한울 · 정원철

1. 하반기 국정운영의 기회와 도전요인 : 지지율상승과 국정 비관론 급감, 국민관심 분산은 부담
2. 이명박 정부의 8.15 승부수를 보는 국민여론 : 중도실용 · 남북관계 · 정치개혁
3. [부록] 교차표

□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

□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1. MB취임 1년 6개월, 이명박 정부의 도전과 기회 요인

하반기 경제/남북관계 낙관적 전망 늘고, 비관론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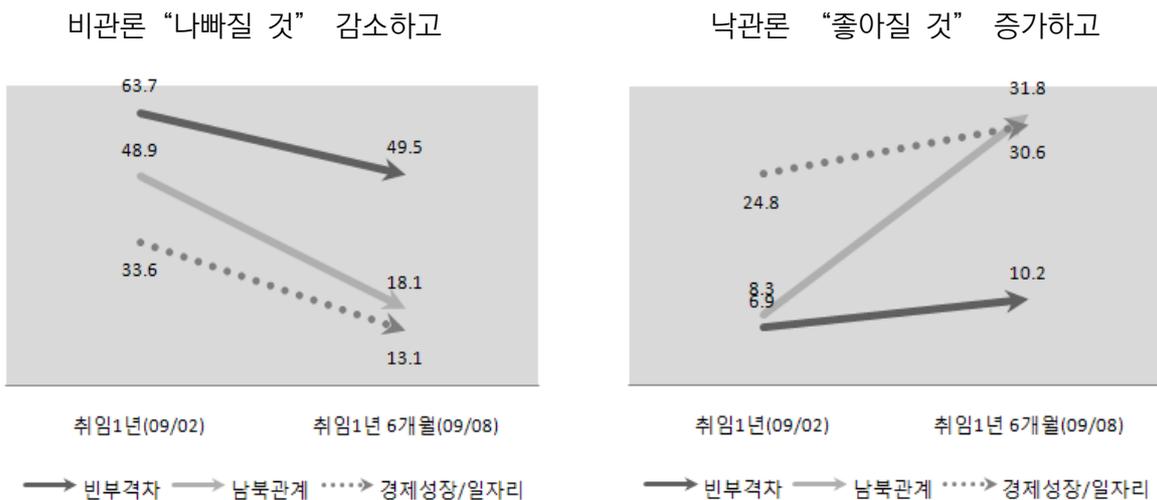
국정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편차는 부담 : 정부 우선순위 선정 및 국력결집 어려워

▣ 국정운영 청신호 : 지지율 상승과 하반기 경제/남북관계 낙관적 전망 높아져

하반기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하락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중도실용주의, 정치개혁이라는 정국반전 카드를 제시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낙관론 또한 커지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중앙선데이, 한국리서치가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기간인 8월 22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서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 3.5%p다.

지난 7월 30.5%였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6.8% 상승한 37.3%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남북관계 및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낙관적 전망이 부정적 전망을 앞서고 있다. 올 2월 MB 취임 1주년 즈음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남북관계, 빈부격차 해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낙관론이 서서히 늘어나고 비관론은 급감하는 추세다.

[그림1] 6개월간 분야별 전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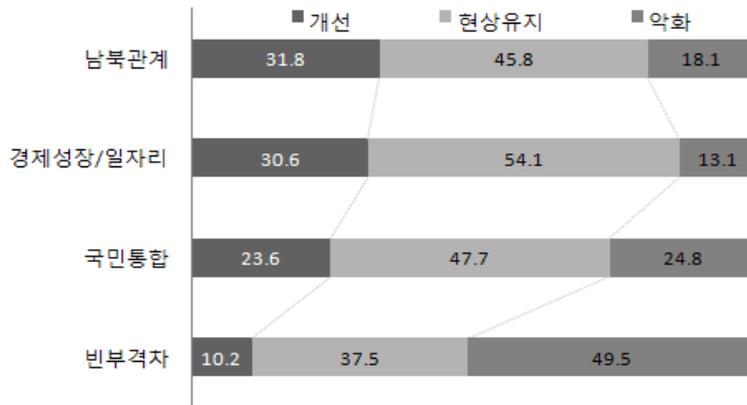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경우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지난 2월의 24.8%에서 30.6%로 증가한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론은 33.6%에서 13.1%로 크게 줄었다. 빈부격차 문제에서는 현재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10.2%)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론(49.5%)이 많다. 그러나 지난 2월 조사에서 빈부격차에 대한 낙관론(6.9%)과 비관론(63.7%)간의 격차가 무려 56.8%p까지 벌어졌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관련 분야의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경제회복의 기대가 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낙관론이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남북관계다. 남북관계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낙관적 전망이 31.8%로 2월의 8.3%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비관적 응답은 48.9%에서 18.1%로 크게 줄어 들었다. 최근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억류된 현대직원의 석방, 북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을 계기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2] 각 분야 하반기 전망(%)



[표1] 2009년 2월과 8월 사이 주요 분야 전망 변화(%)

	취임1년 (2009년 2월)			취임1년 6개월 (2009년 8월)		
	악화	현상유지	개선	악화	현상유지	개선
빈부격차	63.7	28.8	6.9	49.5	37.5	10.2
남북관계	48.9	38.0	8.3	18.1	45.8	31.8
경제성장/일자리	33.6	39.6	24.8	13.1	54.1	30.6
국민통합	-	-	-	24.8	47.7	23.6

▣ 국정 우선순위 인식 편차는 부담 : 국정우선순위 선정과 정책수단 마련 쉽지 않아

정부입장에서 볼 때 부담요인도 적지 않다. 낙관론은 늘고 비관론이 줄기는 했지만 국민 다수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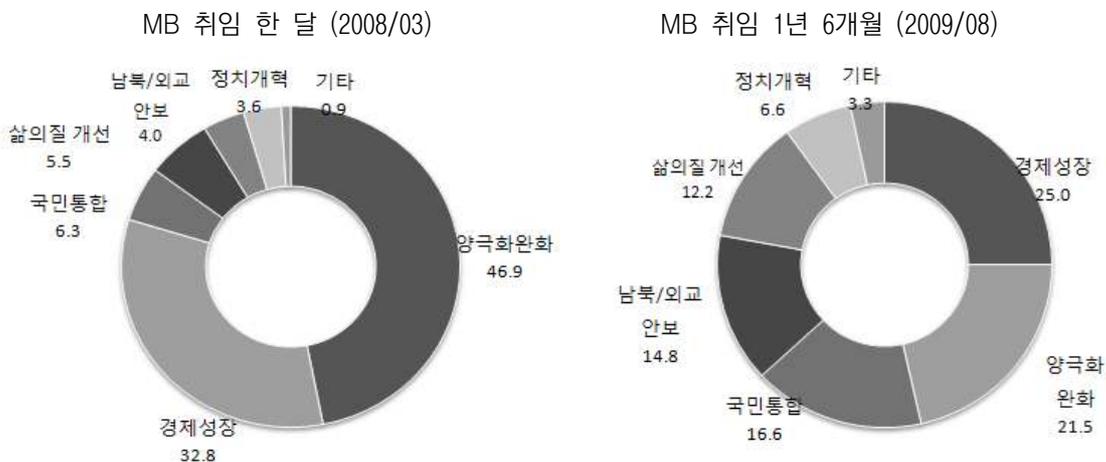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국정과제를 물어본 결과 집권초기에는 국민 관심이 ‘경제성장’ 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 라는 양대 과제에 집중되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들 과제와 더불어 ‘국민통합’ 및 ‘남북관계/외교안보’ 문제해결 요구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북한 핵실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미디어법 파행 등 다양한 국내외적 불안요인이 중첩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우선순위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 직후 실시한 2008년 3월 조사에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46.9%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 양극화 문제를 꼽았다. ‘경제성장’ 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올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조사에서도 취임직후 조사에 비해 다소 줄기는 했지만 33.9%로 경제 양극화 문제가 여전히 1위, 경제성장이 26.6%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경제성장’ 을 국정 최우선 과제라 응답한 응답자는 지난 조사에 비해 7.8%p 줄어 25.0%로 떨어졌고, ‘경제양극화 완화’ 는 무려 15.4%p 감소한 21.5%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여론조사로는 처음으로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입장이 양극화 문제를 우선하는 입장을 앞섰다.

반면 취임직후 조사에서 ‘국민통합’ 을 강조한 응답자는 6.3%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6.6%로 증가했고,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과제를 꼽은 응답자도 4.0%에서 14.8%로 증가했다. 이외에 ‘개인의 삶의 질 개선’ 을 정부의 최대과제로 꼽은 응답자도 5.5%에서 12.2%로 증가했고 ‘정치개혁’ 을 꼽은 응답도 3.6%에서 6.6%로 다소 증가했다. 국정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양해질수록 정부의 정책대응이 어려워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정부의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림3]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최우선 국정과제 인식 변화



[표1] 최우선 국정과제 인식 변화

최우선 국정과제	MB 취임 1개월(08/03)	취임 1년(09/02)	취임 1년 6개월(09/08)
경제성장	32.8	26.6	25.0
경제 양극화 완화	46.9	33.9	21.5
국민통합	6.3	13.9	16.6
남북/외교/안보	4.0	11.4	14.8
삶의질개선	5.5	6.0	12.2
정치개혁	3.6	7.4	6.6
기타	0.9	0.8	3.3

2. 8.15 정국반전 카드를 보는 국민여론

중도실용 · 남북관계 · 정치개혁을 보는 국민여론 일단은 청신호
잠복된 불안요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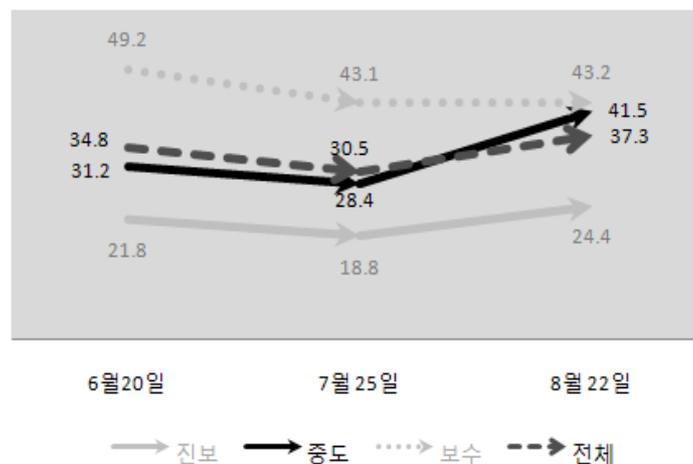
이명박 정부가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국 반전의 카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일단 우호적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상승은 중도층의 지지율 급등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생각되었던 남북관계가 현정은 회장의 방북, 억류된 현대직원의 석방,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 등으로 급격하게 해빙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제시한 행정구역 재편 및 선거제도 변화의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은 우호적이다.

▣ 중도실용주의 효과: 이명박 지지율 전월대비 6.8%p 상승, 중도층 지지 13.1%p 상승
보수층에서의 지지 약화 상쇄해

최근 몇 개월간의 지지율 변화를 보면 중도실용노선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로 자리 잡아 가면서 이념적 중도층과 진보층의 국정지지율이 높아지고 보수층의 지지율은 낮아지고 있다.

우선, 이념집단별로 지지율 변화를 보면 중도층의 국정지지율은 6월 31.2%, 7월에는 28.4%로 떨어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1.5%까지 높아졌다. 7월 대비 13.1%p나 증가하여 보수층의 국정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진보층에서도 7월에 비해 5.6%p 상승한 24.4%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1] 이념집단별 국정지지율과 전체 국정지지율 변화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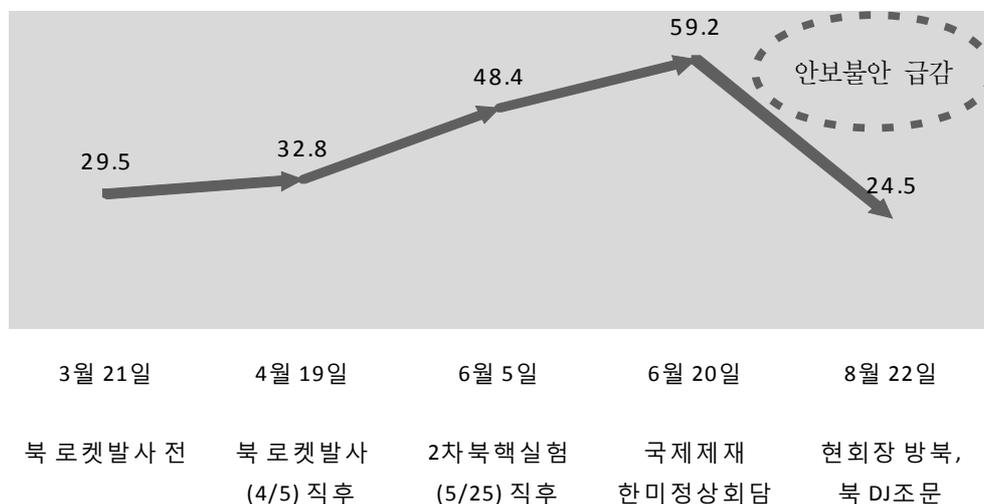
반면, 보수층에서의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지난 6월에 49.2%, 7월에서는 43.1%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도 43.2%로 정체되어 중도층의 국정지지율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주의와 통합을 강조할수록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소위 과도한 산토끼 사냥으로 집토끼가 뛰어나갈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 남북관계 개선 기대 : 두 달 사이 “안보 불안하다” 급감 59.2%(6/20)→ 24.5%(8/22)

북한 핵문제 해결전망, 낙관 VS. 비관 팽팽, MB 대북정책

한편, 북한 로켓발사, 제2차 북핵실험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등으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안보불안감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3월 조사에서 한국안보가 불안하다는 의견이 29.5%였지만, 제2차 북핵실험 직후인 6월 5일 조사에서는 48.4%, 6월 20일 조사에서는 무려 59.2%까지 치솟은 바 있다. 최근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을 비롯해 현대현정은 회장의 방북 그리고 북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 등 남북관계의 호재로 인해 안보불안감은 24.5%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반기 대북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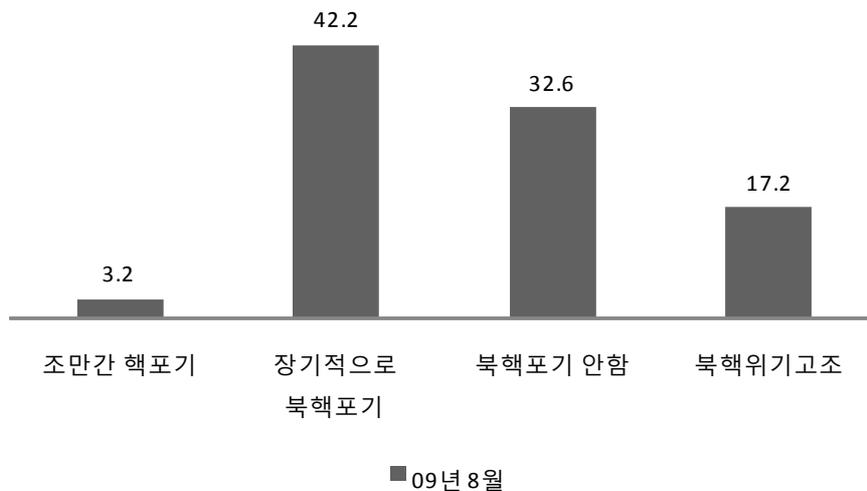
[그림1] 국민 안보불안감 변화: “한국 안보 불안하다” (%)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약해지고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전망에 대한 낙관이 늘었지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남북관계 변화를 달가워만할 수는 없다. 우선 북한의 태도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체제생존전략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북한 당국이 쉽게 포기할 리 없다. 우리 국민들 역시 정부가 대북지원 및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핵

의 해결전망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조만간 북한이 핵포기를 할 것이라는 응답은 3.2%에 그쳤고 장기적으로 북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이 42.2%였다. 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 주변국이 북한 핵을 인정하는 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32.6%였다. 북한의 핵문제가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가장 비관적인 전망도 17.2%나 되었다. 선택포기 후지원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에 대한 국내 여론도 상당히 엇갈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2] 북핵해결 전망 (%)



▣ 국민통합 위한 정치개혁 3대 과제 : 여론은 우호적, 이해당사자 반발 해소책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국민통합방안으로 행정계층 축소하고 선거회수를 줄이고 지역별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국민여론은 우호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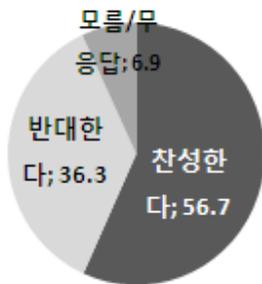
우선, 도를 없애고 인접 시나 군을 통합해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드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매우 찬성한다 16.4% + 찬성하는 편이다 40.4%)은 56.9%로 반대한다는 입장(매우 반대한다 8.3% + 반대하는 편이다 28.0%)의 36.3%에 비해 20.6% 포인트(P) 높았다.

한편 선거제도에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거회수를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 여론은 훨씬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81.2%가 찬성한다는 입장(매우 찬성한다 43.3% + 찬성하는 편이다 37.9%)을 밝힘으로써 반대한다는 입장 15.6%(매우 반대한다 3.7% + 반대하는 편이다 11.8%)보다 다섯 배 이상 높았다.

한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핵심방안으로서 한 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의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찬성여론이 많았다. 53.4%가 찬성한다는 입장(매우 반대한다 17.7% + 반대하는 편이다 35.7%)이고 반대한다는 입장(매우 반대한다 14.0% + 반대하는 편이다 26.8%)은 40.8%였다. 선거 횟수를 줄이자는 주장보다는 국민들의 지지가 갈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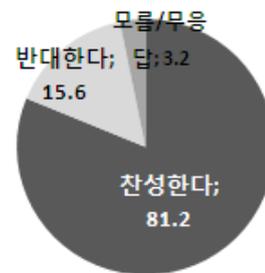
[그림1] 행정구역 개편(%)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모름/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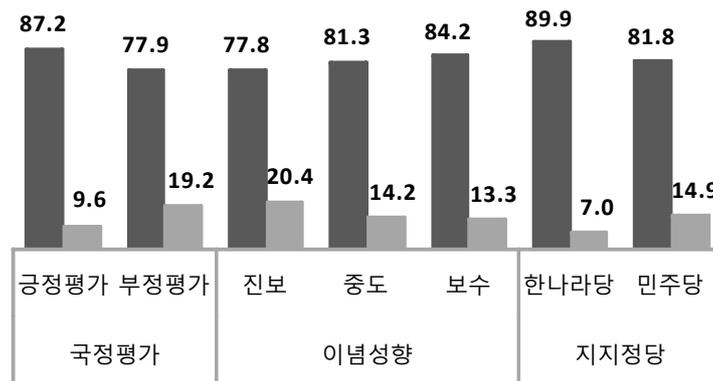
[그림2] 선거횟수 조정(%)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모름/무응답



[그림3] 국정평가/이념/지지정당별 선거횟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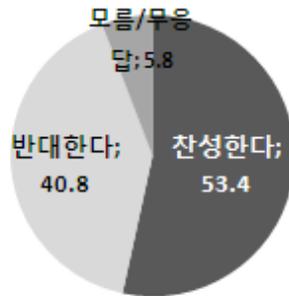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4] 선거구제 조정(%)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모름/무응답



행정구역 재편이나 선거회수 조정, 중대선거구제 등의 경우 대통령지지, 정당지지, 이념성향 등 정치적 입장과 태도에 따른 인식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정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개혁안에 대한 국민여론이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실제 개혁안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정치개혁 이슈의 경우 국민들의 최우선 국정과제에서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는 주제이다.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과 안목을 요하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분포를 기준으로 정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정치권이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중요한 변수다. 하반기 국정운영의 승부수로 띄운 정치개혁 법안이 실질적인 개혁정책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